

# 임금과 근로자 생활

이 정 우(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조 우 현(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目 次)

I. 머리말

II. 임금과 근로자생활:  
거시적 접근

III. 임금과 근로자생활:  
미시적 접근

IV. 맺는 말 및 정책적 제언

## I.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광범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음이 최근의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1989년 10월 조사한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자의식조사연구』에 의하면 대답한 2,175명의 근로자들 중 자신의 노력에 비해 경제적 대가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2.1%로 나타났다(p. 135-139).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현실에 뿌리를 둔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선망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의 임금임상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난 성장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의 임금상승 이후 근로자생활이 어떠한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앞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임금과 근로자생활에 관하여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가구의 소득, 소비에 관한 정부발표의 통계를 이용한 거시적 접근에 의한 분석을 한 후 임금과 생계비 변동추이를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순서를 밝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가구의 생활에 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는 결론부분에서 약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II. 임금과 근로자생활: 거시적 접근

### 1. 임금과 노동생산성

지난 20-30년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기회가 대폭 증가하여 실업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실질임금과 근로자가구소득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왔음은 한국공업화의 긍정적 성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다른 계급이나 집단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임금, 물가,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요약한 <표 1>을 보자. <표 1>은 1970년에서 1989년 사이 우리나라 비농업부문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비자물가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팔목할 만큼 상승하였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실질임금으로 따지더라도 1989년의 실질임금은 1970년의 4배에

(표 1) 임금, 물가와 노동생산성의 추이  
(비농업부문 상용근로자)

연도	명목임금	소비자		물적노동		부가가치	
		(지수)	물가지수	실질임금	(지수)		생산성지수
A: 수준(원, 지수)							
1970	17831	( 100)	(100)	17831	(100)	(100)	
1980	176058	( 987)	(451)	39063	(219)	(260)	( 59.8)
1989	541000	(3034)	(762)	70997	(398)	(641)	(156.5)
B: 성장율(%)							
1970-80	25.7		16.2	8.2		10.0	
1980-89	13.3		6.0	6.9		10.5	11.1
1970-89	19.7		11.3	7.5		10.3	

주: 노동생산성지수의 계산은 제조업, 광업, 전기업만 포함됨.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는 1985년(=100)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 1990년 4/4분기.

달하여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생활수준의 상승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실질임금의 추이를 (물적)노동생산성의 추이와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뒤떨어짐으로써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소득분배의 몫이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화해왔음을 추측케 한다.

특히 1980년대에 와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0-89년 사이에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0.5% 상승해왔으나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6.9%에 그쳤다. 이것은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오면 소득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적어도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적 분배가 악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1980년대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물적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므로 전자를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 2. 임금패리티로 본 근로자 지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하나의 지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데 가끔 사용되는 지표로 상대적 소득분배율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노동에 돌아가는 몫과 자본에 돌아가는 몫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의 상대적 분배율은 아직 선진자본주의국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지난 20여년간 상승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무기,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분배율체계」,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1984).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의 소득분배상의 상대적 지위를 유추하려면 약간의 주의를 요한다. 즉, 상대적 분배율의 상승이 곧 근로자들의 상대적 지위의 개선을 직접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노동분배율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전체 취업자 중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지위개선으로 볼 수 있겠으나 후자는 다만 취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전자와 후자로 분해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상대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는 그런 계산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970-85년의 값은 이중희, 『상대적 소득분배분의 이론과 실제』에서 인용한 것이며, 그 이후의 연도는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표 2>의 칼럼 (1)은 요소비용으로 측정된 국내소득 중 피용자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해당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명히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근로자의 상대적 소득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표 2〉 임금패리티의 변동

연 도	노동소득분배율 (1)	근로자/취업자 (2)	임금패리티 (3) = (1)/(2)
1970	39.5	38.9	101.5
1975	39.6	40.6	97.5
1980	50.1	47.3	105.9
1981	49.2	47.2	104.2
1982	50.8	47.6	106.7
1983	52.8	49.5	106.7
1984	52.1	52.9	98.5
1985	50.3	54.2	93.0
1986	49.4	54.4	90.7
1987	50.8	56.2	90.3
1988	53.8	57.0	94.5
1989p	55.6	59.1	94.1

주: (1) = 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내소득

(2) = 피용자수/총취업자수

(3) = 피용자 1인당소득/1인당 요소비용국내소득 = (1)/(2)

자료: 이종희, 『상대적 소득분배분의 이론과 실제』, 매일경제신문사, 1988.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0.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9.

칼럼(2)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 중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수의 증가를 감안했을 때 근로자 상대소득의 지표는 칼럼(3)에 요약되어 있듯이 추세적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 칼럼(3)의 임금패리티의 개념은 1인당 임금 대 1인당국내소득의 비율로서 국민경제 전체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83년 이후 1987년까지 이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속도가 눈에 뵈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87년의 90.3이란 값은 1970년 이후 최저의 값으로서 기억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은 앞서 본 〈표 1〉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1980년대에 들어와 근로자들의 상대적 궁핍화를 시사해주는 또하나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패리티는 1987년에 최저치를 보인 뒤 약간은 회복의 징후가 보이지만, 1989년 현재 94.1로서 1983년에 비교한다면 여전히 약 10% 정도 낮은 상태에 있다. 1987년 이후 급속한 임금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89년까지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3. 소비지출의 비교

근로자의 상대적 궁핍화 여부를 보여주는 추가적 자료로서 우리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이외가구의 소비수준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표 3>은 경제기획원에서 1963년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는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이외가구의 소비수준과 앵겔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근로자는 다시 봉급자 가구와 노무자가구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일견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구분인 것처럼 보이거나 만드시 그런 것인지는 표본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확실치 않다. 그러나 초기의 어떤 해의 표본 중에는 봉급자 가구의 상당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때도 있는 것으로 보아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구분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아래 표를 보기로 하자.

<표 3> 근로자와 비근로자 가계의 상대적 소비지출수준

연도	상대적 소비지출수준			앵겔계수		
	봉급자	노무자	비근로자	봉급자	노무자	비근로자
1963	128.5	64.4	100	51.0	60.1	53.1
1965	120.1	67.0	100	52.7	63.4	56.2
1970	104.5	68.8	100	38.5	44.0	40.3
1975	116.4	73.3	100	40.5	48.9	42.9
1980	124.8	76.2	100	32.7	38.6	36.2
1981	132.0	79.1	100	32.5	38.8	37.0
1982	118.8	74.4	100	37.6	42.9	40.1
1983	119.3	75.4	100	35.9	41.2	39.1
1984	118.6	74.4	100	34.9	40.3	37.6
1985	119.7	72.7	100	33.8	39.7	37.0
1986	115.9	73.2	100	32.8	38.2	36.1
1987	112.6	73.7	100	32.7	36.6	34.6
1988	113.6	71.8	100	31.8	36.3	34.3
1989	110.2	70.3	100	30.2	34.5	31.1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표 3>을 보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수준을 기준(=100)으로 하였을 때 근로자가구(봉급자와 노무자)의 상대적 소비지출수준이 1963년에서 1989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비지출수준은 항상 봉급자 > 비근로자 > 노무자의 순서이며, 장기적으로 이들 사이의 소비격차는 축소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이들 사이의 소비격차는 일률적으로 축소해온 것이 아니고 8~10년 정도를 주기로 하는 상하운동을 거치고 있다. 1963년에 비해 1970년대초는 봉급자와 노무자 양쪽 다 소비의 상대적 하락이 있으며, 1981년은 거꾸로 근로자가구의 소비증가의 피크이다. 그러나 1981년 이후의 시기는 계속해서 근로자가구(봉급근로자와 노무자 함께)의 상대적 소비가 축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실은 위의 <표 1> 및 <표 2>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1980년대가 근로자의 상대적 지위 하락의 시기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근로자가구의 상대적 소비가 비근로자가구에 비해 하락하고 있음은 위의 <표 2>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상대적 지위하락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엔젤계수(소비지출 중 식품비의 비중)를 보면 1963-1989년의 4반세기 동안 꾸준한 하락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전반적 생활수준의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엔젤계수는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50%가 넘으면 빈곤층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시의 근로자/비근로자 할 것 없이 50%를 초과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말에 오면 30%대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급자, 노무자, 비근로자의 구별없이 모든 계급/계층에서 엔젤계수의 하락이 나타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축복할 만한 현상인지 어떤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 주거비, 교육비 등의 부담이 늘어났고, 엔젤계수의 하락은 이런 반대경향을 상쇄하기 위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늘어나는 주거비와 교육비부담을 감당하기 위하여 식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엔젤계수의 하락에 대한 확실한 평가는 좀더 깊은 분석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 Ⅲ. 임금과 근로자생활에 관한 미시적 분석

#### 1. 최저임금 계층의 생계비와 임금

임금과 근로자생활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는 일반적으로 취하여온 접근방법을 평가하고자 한다.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살펴볼 때, 근로자임금의 실질구매력 즉 실질임금이

흔히 검토되어 왔다. 실질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의 의식주,문화생활에 걸쳐 지배할 수 있는 상품량이며 흔히  $W/P$  ( $W$ :임금,  $P$ :소비자물가)로 측정된다. 이는 상대가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임금에 관한 논의는 노동자생활에 관한 미시적 분석이 되는 것이다.

실질임금 추세를 논의하는 데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접근방법은 평균임금과 평균소비자물가의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각하며 직종별,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사회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우리사회의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대변치 못하는 단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평균 소비자물가 작성시에는 근로자가 구입치 않는 품목이 다수 들어 있거나 근로자가 구입하는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에서 각 상품의 상대적 비중(가중치)이 소비자 전체의 상대적 비중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예컨대 주거비의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작성시에는 12.9%이나 근로자가구는 약 23%가 된다. 이는 <표 5>에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에 설명될 것이다.)에 우리는 평균적 임금과 평균적 소비자물가의 변화를 검토하는 방법을 지양할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근로자 소득 또는 지출계층 즉 근로자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계층별 분포에서 최빈값계층을 추출하여 최빈값계층의 임금과 생계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임금과 실질생활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계층별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친(skewed to the left)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 때 근로자소득과 지출의 변화추이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논의하자면 근로자소득과 지출의 표본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은 평균값계층이 아니라 최빈값 계층이며 최빈값 계층의 분석이야말로 생활실감에 가장 부합되는 계층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도시가계조사 결과에 나타난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에 의하면 최빈값계층의 소득은 86년에는 30만~40만원, 87년에는 30만~45만원, 88년에는 35만원~50만원이었고 89년에는 45만~60만원이었다(표 4참조).

이 중에서 89년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의 논의를 계속해 보자. 89년에 최빈값계층의 소득은 45만~60만원인데 평균가구원수는 3.8인, 가구주 평균연령은 35.2세이다. 이 최빈값계층의 가구소득은 52.3만원이며 이 중 근로소득은 46.7만원이다. 근로소득 중 가구주 근로소득은 41.6만원이다. 가구소득과 가구의 근로소득간의 차액 50.7천원은 가구주 이외 취업자의 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자료에는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처리하여 가구주 1인 취업가구 지출분포에서 4인가구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을 구하는데 이 때 가구주 1인 취업 지출분포의 최빈값계층을 우리는 표준적 가구라고 부르겠다.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

〈표 4〉 최빈값 소득계층의 특성

	1986	1987	1988	1989
최빈값 소득계층	30-40만원	30-45만원	35-50만원	45-60만원
상대빈도	610/2705	774/2812	675/2794	557/2790
가구당 인원수	3.97	3.77	3.74	3.78
가구당 취업인원수	1.31	1.30	1.31	1.32
가구당 평균연령	34.75	34.20	34.74	35.16
가구소득	344.4	371.3	422.9	522.8
가구 근로소득	315.6	334.8	383.5	466.9
가구주 근로소득	284.1	298.5	342.6	416.2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31.5	36.5	40.9	50.9
소비지출	263.4	286.0	318.5	402.5
주거비	13.8	16.7	16.2	19.4

주:(1) 각 연도의 소득계층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어 가구별 통계값은 가중 평균치임.

(2) 소득과 지출에 관한 통계치의 단위는 천원임.

자료: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는 〈표 5〉에 그리고 항목별 구성비는 <표 6>에 나와 있다.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와 표준적 가구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생활의 향상여부를 가장 선명한 형태로 살펴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주 1인만 취업하는 4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관한 정보는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구의 최빈값 소

〈표 5〉 표준적 가구의 소비지출(4인가구)

년 도	86	87	88	89	전년대비 증가율(%)		
					87	88	89
소 비 지 출	268,268	305,667	346,348	440,413	13.9	13.3	27.2
식 료 품	87,108	92,870	94,972	125,850	6.6	2.2	32.5
주 거	63,034	68,433	76,818	97,334	8.6	12.3	26.7
광 열 / 수 도	20,132	22,853	18,846	22,542	11.4	-17.5	19.6
가 구 / 집 기	8,938	10,373	14,075	15,284	16.1	35.6	8.6
피 복 / 신 발	14,385	18,362	19,734	26,815	30.0	7.0	36.0
보 건 / 의 료	12,464	17,689	22,120	26,657	41.6	24.8	20.4
교 육 / 교 양	18,769	26,930	36,314	45,814	43.9	34.9	26.1
교 통 / 통 신	13,479	14,432	16,961	20,157	6.7	18.0	18.8
기 타	23,770	33,725	46,503	59,956	41.5	38.0	28.8

자료:장현준,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KDI, 1987.

조우현, 「'87, '88 표준생계비 산정과 몇가지 문제점」, 『경제학연구』 1989.

박영범, 조우현,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표 6〉 표준직 가구에 있어서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86	87	88	89
식품비	32.5	30.4	27.4	28.6
주거비	23.5	22.4	22.2	22.1
광열/수도	7.5	7.5	5.4	5.1
가구/집기	3.3	3.4	4.1	3.5
피복/신발	5.4	6.0	5.7	6.1
보건/의료	4.6	5.8	6.4	6.1
교육/교양	7.0	8.8	10.5	10.4
교통/통신	5.0	4.7	4.9	4.6
기타	8.9	11.0	13.4	13.6
소비지출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표 5〉와 동일.

특계층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표준적 가구의 명목임금을 추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겠다.

(1) 우리는 1986년-1989년까지 각 연도에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검토한 후 최빈값 소득계층을 추출하였는데 최빈값 소득계층의 특징은 이미 〈표 4〉에 요약된 바 있다. 예컨대 1989년에 최빈값 소득계층은 45~60만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구이며 이 계층에 속한 근로자가구는 조사대상가구 2,790가구 중 20.0%에 해당하는 557가구이다.

(2) 우리는 표준적 가구 및 최빈값 소득계층 근로자가구의 주거형태를 전세라고 가정할 것이다. 1990년 10월에 행한 조우현, 이정우의 조사<sup>1)</sup>에 의하면 단신근로자를 포함한 1822가구 중에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2.5%, 무주택자는 67.5%가 있는데 무주택자 중 66.0%가 전세, 9.7%가 보증부월세, 4.5%가 (보증금 없는) 월세, 4.2%가 삭월세, 5.0%가 사원주택, 7.2%가 기숙사, 3.1%가 임대아파트를 주택점유형태로 하고 있었다. 무주택자 중 2/3가 전세입자이므로 전세가 근로자의 전형적인 주택점유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3) 최빈값 소득계층의 가구주 근로소득,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가구의 근로소득, 가구의 소비지출, 소비지출 중 주거비등에 관한 자료 또한 〈표 4〉에 나와 있다. 이 중 소비지출 항목 중 주거비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최빈값 소득계층의 주거형태는 전세라고 가정하였으므로 주거비의 주요항목은 전세평가액이어야 할 것이나 〈표 4〉에 있는 소비지출 중 주거비에는 전세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빈값 소득계층의 가구당 평균인원수를 약 4인으로 볼 수 있고 소득과 소비지출과는 일정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평가액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표준적 가구의 주거비를 최빈값 소득계층의 주거비의 대리변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는 최빈값 소득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주거비를 빼고 표준적 가구의 주거비를 포함하여 추정된 생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는 1986년 312.6천원, 1987년 337.7천원, 1988년 379.1천원, 1989년 480.4천원이다.

<표 7> 최빈값 소득계층의 추정생계비

	1986	1987	1988	1989
A. 최빈값 소득계층의 소비지출	263.4	286.0	318.5	402.5
B. 주거비	13.8	16.7	16.2	19.4
C. 표준적 가구의 주거비	63.0	68.4	76.8	97.3
D. 추정생계비 (=A-B+C)	312.6	337.7	379.1	480.4
E. [추정생계비-기타 가구원 소득]	281.1	301.4	338.2	429.7
F.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	268.3	305.7	346.3	440.4

(4) 최빈값 소득계층의 추정생계비는 전년대비하여 1987년 8.0% 증가, 1988년 12.3% 증가, 1989년 26.7% 증가하였다. 최빈값 소득계층의 가구당 취업인원수는 1.3인으로 86-89년간 일정한데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대비하여 87년 6.1%, 88년 14.5%, 89년 21.7% 증가하였다. 최빈값 소득계층에 있어서 3개년 평균 추정생계비 증가율은 15.7%, 3개년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14.1%로써 최빈값 소득계층의 생계비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상회하여 최빈값 소득계층의 생활은 근소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는 최빈값 소득계층의 추정생계비에서 기타 가구원 소득을 빼보았다. (<표 7>의 E) 그 값은 86년 281.1천원, 87년 301.4천원, 88년 338.2천원, 89년 429.7천원이었다. 그런데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 지출액은 86년 268.3천원, 87년 305.7천원, 88년 346.3천원, 89년 440.4천원이었으므로 그 금액의 차이는 각 연도에서 크기는 1만 5천원, 적게는 4천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표 7>의 E, F의 비교).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의 소비지출 최빈값계층의 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최빈값소득계층의 생계비에서 가구주 이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생계비와 거의 유사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준적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의미를 검토해보자. 표준적 가구에서 생계비 지출액이 있고 추가로 생계비 지출필요가 있을 때는 여타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여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을 남김없이 생계비로 지출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이 사실이라면 표준적 가구의 근로소득(또는 명목임금)은 간단히 추정될 수

있다. 즉 표준적 가구의 근로소득(또는 명목임금)의 추정치들을 최빈값 소득계층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이라고 대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빈값 소득계층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1986년 284.1천원, 1987년 298.5천원, 1988년 342.6천원, 1989년 416.2천원이다.

이제 우리는 87년 이후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의 임금상승과 가구주 1인취업가구의 생계비의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임금 또는 실질생활을 가장 선명한 형태로 논의할 수 있다. 즉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의 생계비 지출과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의 근로소득 즉 임금을 비교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능가하면 근로자의 실질생활은 악화되며 반대로 생계비 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근로자의 실질생활은 향상된다.

이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계층 즉 표준적 가구에서 전년대비 임금상승률은 87년 5.1%, 88년 14.8%, 89년 21.5%였다<sup>2)</sup>. 전년대비 생계비 지출은 87년 13.9%, 88년 19.2%, 89년 27.2%였다. 생계비 지출상승의 3개년 평균은 20.1%, 임금상승률의 3개년 평균은 13.8%이어서 근로자의 실질생활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계비 상승률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생계비율 구성하는 항목이 매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소득변화와 가격변화의 결과로 생계비 구성항목이 변화되며 따라서 생계비 자체가 변동된다. 근로자가 구입하는 상품량에 관한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정하여 놓고 이 마켓 바스켓에 속하는 상품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살펴본 후 임금상승률과 대비해야만 근로자가 지배, 장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즉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증가한 것인지에 관한 보다 엄밀한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소비지출 최빈값계층의 마켓바스켓과 생계비변동에 관한 자료는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다. 그 대신에 근로자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 (<표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품비, 주거비와 교육교양비이며 이들 지출은 1989년 현재 가계지출의 61.1%를 점한다) 중 주거비와 교육교양비 항목만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생활에 대해 보다 미시적 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행하고자 한다.

## 2. 주거비 상승과 근로자의 실질생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계층, 즉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에 있어서 1989년 주거비는 97,334원으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1%였다. 1989년의 주거비는 88년 대비하여 26.7% 증가하여 주거비가 폭등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 폭등이 도시근로자가 주택환경을 개선한 결과인가(예컨대 주거공간의 확대의 결과인가) 아니면 주거환경은 종전과 동일한데 집값, 전세값 상승의 결과인가 아니면 집값,

전세값 상승의 결과로 주거비 상승과 더불어 주거환경은 더 열악하게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표 8〉에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말까지의 도시가구의 자가보유비율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도시가구는 지난 20여년간 계속해서 주택부족으로 시달려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악화되어왔다. 1960년대만 해도 자가보유비율이 2/3 정도가 되었으나 지금은 40% 정도로 떨어져버렸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구의 상태는 비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중반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 사이에 주택보유비율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1980년에 오면 약 10% 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나타난다. 유감스럽게도 1980년대 이후에는 비근로자가구의 주택보유상황이 더 이상 이 통계에 파악되지 않으나 통계가 있는 1980년까지 근로자와 비근로자는 함께 자가보유비율이 떨어지면서도 근로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 근로자들의 자가보유비율은 1986년 이후에는 완만하나마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앞의 몇가지 증거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상대적 지위 악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무주택가구의 높은 전세금 또는 월세 부담을 생각할 때 이 점은 단순한 상대적 지위 악화가 아니라 절대적 궁핍화의 지표로 간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표 8〉 근로자/비근로자 가구의 자가보유비율 (%)

연도	근로자	비근로자	연도	근로자	비근로자
1965	63.7	65.3	1977	42.0	50.2
1966	63.8	68.7	1978	40.5	50.3
1967	67.1	73.6	1979	40.7	48.4
1968	66.0	74.1	1980	37.9	47.1
1969	54.4	58.3	1982	36.7	-
1970	54.4	58.4	1983	38.6	-
1971	51.3	59.0	1984	38.1	-
1972	50.7	57.6	1985	36.6	-
1973	46.8	53.6	1986	38.0	-
1974	46.1	55.5	1987	38.1	-
1975	49.7	54.9	1988	39.0	-
1976	46.4	56.0	1989	40.0	-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근로자가구의 자가보유비율이 1985년 36.6%를 최하점으로 하여 그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에 이르면 1985년의 자가보유비율로 되돌아가 근로자가구의 주

택사정은 대단히 열악해졌다는 자료가 최근의 조사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우현, 이정우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 10월 현재 6대 도시에서 2인가구 이상 1602 근로자가구 중에서 자가보유비율은 36.6%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2인이상 2790 근로자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전국 50개 도시를 조사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총의 조사결과와 경제기획원의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인 판단자료로는 이용될 수 있다.

근로자가구의 자가보유비율이 1990년에 낮아졌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1988-89년간의 주거비폭등은 1990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조우현, 이정우의 조사에 의하면 단신근로자를 포함한 1822가구 중에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2.5%, 무주택자는 67.5%였는데 무주택자중 2/3가 전세입자이므로 전세가 근로자의 전형적인 주택점유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1990년 10월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126만원, 2년전에는 평균 786만원으로 2년간 54.0% 상승하였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연 평균 24.1%가 되는 셈이다. <표 5>에서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의 근로자는 전세거주자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므로 <표 5>에 나타난 1988-89년간 주거비 상승률 26.7%는 우리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은행의 1990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서울지역 전세값 상승률에 관한 자료가 있다. 이에 의하면 서울지역 전세값 상승률은 1989년에 23.7%, 1990년은 21.9%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한국은행의 통계에는 전국 전세값 상승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지역 전세값 상승률에 관한 자료는 우리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1990년에도 1989년에 이어 전세값이 크게 상승되었다고 판단한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임대제도이므로 전세값 상승률은 전세평가액(귀속임대료)의 형태로 동률의 주거비 상승을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1990년에도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에서는 23~24%의 주거비가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세값상승은 귀속임대료를 증가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전세입자는 상승한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측면은 정부통계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우현, 이정우 조사에서는 전세보증금 중 자신의 돈의 비중은 1990년 현재 79.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20.7%는 차입금의 비중이 되는 셈이다. 평균 전세보증금이 1226만원이므로 972만원은 자신의 돈이고 차입한 금액 254만원은 지난 2년간 전세보증금 상승액 평균 43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전세 사는 사람의 경우 전세금 상승으로 대부분 부채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세금 상승은 플로우(flow)측면에서 귀속임대료를 증대시켜 실질임금을 낮추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스톡(stock)측면에서 자산보유자에게로 부를 이전시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전세금상승이 근로소득자로부터 자산보유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킨 정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산해보자.

전산업 평균임금은 1987년 386.5천원, 1988년 446.4천원, 1989년 540.6천원, 1990년 9월까지 623.0천원으로 1990년 9월까지 명목임금은 1987년 명목임금보다 1.61배 올랐다. 이 때 근로자가 전년도 임금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당해년도의 임금인상분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하자. 조우현, 이정우의 조사시점 1990년 10월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즉 1988년 10월에서 1990년 9월까지 저축가능금액은 1988년은 월 59.8천원, 3개월분 179.4천원, 1989년에는 월 94.2천원, 12개월분 1,130.4천원, 1990년 9개월간은 월 82.4천원, 9개월분 741.6천원, 합계 2,051.4천원이 된다.

이 때 지난 2년간 전세보증금 상승액 4,300천원에서 지난 2년반 동안 임금상승분을 전액 저축했을 때의 저축 가능금액 2,051.4천원을 빼면 2,248.6천원이 된다. 이것은 전세비상승으로 인한 부채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세유지를 위한 부채액 2,540천원과 대단히 근접하는 수치이다.

조우현, 이정우 조사에서 나타난 실증결과를 놓고 볼 때, 1987년 이후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난 2년간의 임금인상분 전액이 지난 2년간 전세금 상승액의 절반밖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임금인상분 전액을 저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자산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 노동자는 전세유지 자체를 위한 부채액까지 짊어지게 되어 향후 몇년간의 임금인상분 전액이 계속 자산소유자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산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여졌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실질생활은 1987년에 비해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더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귀속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보증금 상승액의 일부를 차임금에 의존할 때, 전세입자는 주거공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전세 사는 주거공간을 줄여 살게 됨으로써 전세입자의 주거상황은 더 열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우현, 이정우 조사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자가주택 소유자가 사용하는 건평(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23.7평, 사용하는 방수는 3개인 데 비해 전세입자가 사용하는 건평은 13.4평, 방수는 1.8개인 점으로 미루어 전세입자의 상황이 현재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전세입자의 경우 희망하는 방수와 평수를 물었을 때, 각각 29.0평, 방 3개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현실의 주거공간은 지극히 협소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바는 주거비 폭등은 집값, 전세값 폭등의 결과이며 동시에 주거상황은 더 열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근로자계층의 소득분배상

및 자산분배상의 위치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3. 교육비 지출추이의 문제점

〈표 9〉 1인취업 4인가구 평균소비지출 및 표준적 가구 소비지출과의 비교

	86	87	88	89
소비지출	438,767	477,810	563,612	703,651
식료품	114,902	119,128	141,440	165,233
주거	104,762	110,385	120,037	149,723
광열/수도	26,658	28,467	27,648	29,669
가구/집기	19,616	23,694	22,898	34,617
피복/신발	5,466	29,367	31,482	44,454
보건/의료	8,600	29,632	35,371	51,451
교육/교양	44,169	56,291	62,969	91,435
교통/통신	19,853	21,234	26,352	40,881
기타	54,738	59,613	75,411	96,185
A. 1인취업 4인가구 평균 소비지출	438,767	477,810	563,612	703,651
B. 표준적 가구의 소비지출	268,268	305,667	346,348	440,413
(B/A)×100	61.2%	63.9%	61.4%	62.6%
식품비 A	114,902	117,128	141,440	165,233
B	87,108	92,870	94,972	125,850
(B/A)×100	75.8	79.3	67.1	76.2
주거비 A	104,762	110,385	120,037	149,723
B	63,034	68,433	76,818	97,334
(B/A)×100	60.2	62.0	64.0	65.0
교육/교양 A	44,169	56,291	62,969	91,435
B	18,769	26,930	36,314	45,814
(B/A)×100	42.5	47.8	57.7	50.1
기타 A	54,738	59,613	75,411	96,185
B	23,770	33,725	46,503	59,956
(B/A)×100	43.4	56.6	61.7	62.3

자료:〈표 5〉와 동일.

1인취업 4인가구 소비지출에서 최빈값계층 즉 표준적 가구의 교육비 증가율은 87년 43.9%, 88년 34.9%, 89년 26.1%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

다. 왜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였는가?

우리는 1인취업 4인가구의 항목별 평균소비지출에 대비한 표준적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하여 보았다(〈표 9〉참조). 최빈값계층의 교육/교양비용의 비율은 1986년에는 0.425밖에 되지 않았다. 1인취업 4인가구의 소비지출 총액에 대비한 표준적가구의 소비지출 총액의 비율은 1986년에 0.612였다<sup>4)</sup>. 원래 평균값에 대비한 최빈값의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교육/교양에서는 지출의 불평등도가 더욱 심각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비지출의 불평등도는 세대간 소득 불평등(intergenerational income inequality)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나친 교육/교양비용의 불평등도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1987년 이후 대폭적인 임금상승국면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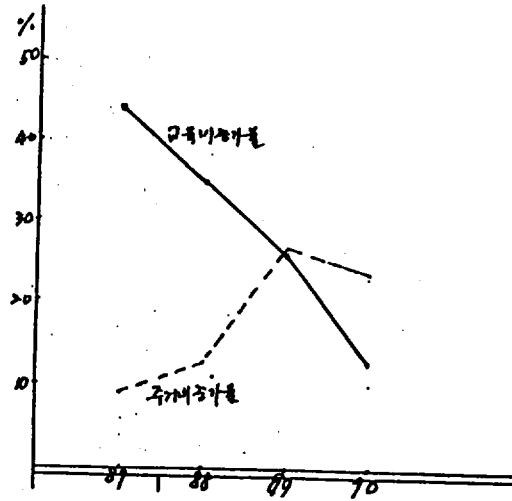
표준적 가구의 교육, 교양비의 지출은 크게 상승한 결과 1인취업 4인가구 평균값에 대비한 표준적 가구의 교육/교양비의 비율이 1986년 0.425에서 1987년 0.478, 1988년 0.577로 교육/교양지출의 불평등도가 교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들의 장래생활에 대한 근로자 가구주의 관심과 노력은 수포화되고 있는 것 같다. 표준적 가구의 교육/교양비는 1989년 26.1% 증가하였으나 1인취업 4인가구 평균에 대비한 비율이 0.501로 떨어졌고 1990년에는 표준적 가구의 교육/교양비는 전년대비 12.6% 증가할 것이 예측되어 1987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왜 자녀들의 장래생활에 대한 가구주의 관심과 노력이 감소되는가?

〈그림 1〉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87년-89년간 표준적 가구의 교육비증가율과 주거비증가율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1990년의 증가율은 표준적 가구의 1990년 3월의 주거비 예측값 120,376원, 교육/교양비 예측값 51,568원(노동연구원 [199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1990.8, p37)을 이용하여 89년 3월대비 증가율을 구한 결과, 주거비 예상 증가율은 1990년에 23.6%이며 교육비 예상 증가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2.6%이다. 〈그림 1〉이 함축하는 바는 표준적 가구에 있어서는 주거비 증가율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없을 때 임금상승은 교육비 증가를 낳고 주거비 증가율이 대단히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클 때는 교육비 증가가 크게 감소된다는 관계 즉 주거비와 교육비간의 상충관계를 시사해주고 있다. 즉 주거비는 현실생활의 지표이나 교육/교양비는 자녀들의 장래생활의 지표라고 할 때, 주거비가 낮을 때는 장래생활에 관심을 가지나 주거비가 높아질 때는 자녀들의 장래생활을 회생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3년간의 주거비폭등이 기왕에 심각했던 교육/교양비 지출의 불평등도를 교정하려는 근로자가구의 노력을 수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림 1〉 교육비 상승률과 주거비 상승률의 추이



#### IV. 맺는 말 — 근로자 생활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안

지난 1987년 이래로 전산업평균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987년에는 10.2%, 1988년에는 15.2%, 1989년에는 21.3%, 1990년 9월 현재 전년대비 15.2%가 상승하였다. 우리는 대폭적인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질생활은 향상되기는커녕 더 열악화되었음을 그리하여 근로자의 소득분배상의 위치 그리고 자산분배상의 위치 또한 저하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현재임금의 지배력 즉 실질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둘째는 장래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요하며 특히 근로자주택 및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경제제도적 차원의 해결이 요구된다. 산업평화와 기업내부의 노사관계안정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때, 물가, 주택, 교육이라는 기업외적 문제는 기업내의 노사분규와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불안정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근로자의 장래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임금(life-time income)을 안정화시키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기업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안은 기업에서의 기업경영성과배분제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기업경영성과의 배분방식으로서 이윤과 임금을 즉각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발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이윤의 즉각적 분배→작업노력의 증가→노동생산성 증대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업경영성과의 배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작업을 행하는 숙련의 증대→숙련의 증대→노동생산성 증가라는  
형태로의 이윤배분

기업경영성과와 임금을 연계시키는 방법은 정태적인 방법(이윤과 임금의 즉각적 연계)과 동태적인 방법(이윤을 노동자 숙련증대에로 투자하여 이윤과 임금을 장기적으로 연계)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보다 요청되고 있으며 후자의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관한 연구가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Kazuo Koike (『Understanding Industrial Relations in Modern Japan』, MacMillan Press, 1988)는 i) 일본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계구조, 기능에 대한 숙련과 지식을 축적하게 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ii) 노동자들은 배치전환을 통하여 작업장의 각 분야에 있어 원칙과 이론 및 실무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과 생산의 보다 나은 방법을 고안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그러한 방법을 집행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고, iii)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높이면 회사가 번영하고 그 결과 빠른 승진과 보다 높은 숙련을 얻을 기회의 획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경영성과와 노동자숙련의 증대가 직결될 때,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기업에 대한 헌신과 기여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숙련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즉, 일본 대기업의 동태적인 성과배분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숙련형성의 문제는 기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사회제도 특히 노사관계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의 차원에서 물가안정, 주택 및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업의 차원에서 기업경영성과배분제를 제시하여 근로자의 현재임금 및 장래임금의 보장이 가시화될 때, 임금인상에 관한 근로자의 자세가 가능할 것이며 협력적 노사관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註]

- 1) 조우현, 이정우, 『신모형에 의한 1990년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승실대, 1991.1)를 위한 조사.
- 2) 비농 전산업 평균임금 상승률은 87년 10.2%, 88년 15.2%, 89년 21.3%로서 3개년 평균임금 상승률은 15.6%였다.
- 3) 한국은행, *Quarterly Economic Review*, 1990.12
- 4) 일본의 경우, 1986년에 1인취업 4인가구 소비지출의 평균값에 대비한 최빈값의 비율은 약 0.750이었다. 식품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0.908, 주거관계비에서는 0.940이었고 피복비에 있어서는 0.674였다. 일본의 통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시산해 보면 그 비율은 전체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0.635, 식품비 0.795, 주거비 0.617, 피복신발비에 있어서는 0.589였다.